

## 젠더평등과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실증: OECD 국가 간 비교를 중심으로\*

류아현\*\*·김교성\*\*\*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젠더평등 증진에 따른 출산율의 반등 가설을 실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980년부터 2017년까지 OECD 16개국의 시계열 자료를 결합하여 산점도분석과 결합시계열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젠더평등 수준과 합계출산율의 U자형 분포가 관찰되었으며, 1990 년대를 기점으로 출산율이 반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1980년대에는 젠더평등 수준과 경제발전 수 준이 낮고 가족급여 지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1990년대부터 젠더 평등 수준과 경제발전 수준, 그리고 가족급여 지출 비중이 모두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이 높게 나타 나고 있다. 따라서 젠더평등 이론에서 강조하듯이, 출산율이 반등하여 젠더평등한 가족균형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성 생애주기의 남성화'와 '남성 생애주기의 여성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어 : 젠더평등, 출산율, 다중균형모델, 가족정책, 결합시계열회귀분석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제1저자: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dktmd1324@naver.com)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kyoseong@cau.ac.kr)

## I. 서론

20세기 중반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난 저출산 현상은 후기 산업사회의 주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아 왔다. 제2차 인구변천 이론(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과 같은 기존의 논의들은 ‘왜 출산율이 낮아지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나 가치관의 변화 등을 주된 요인으로 지목하였다. 1990년대까지 산업화된 국가에서 나타난 가족형태의 불안정성 증가와 결혼 및 출산의 감소 추세는 해당 이론의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일부 국가에서 저출산 추세가 약화되거나 오히려 역전되고 있다는 증거가 관찰되기 시작하면서(Goldscheider, Bernhardt & Lappegård, 2015: 207), 새로운 이론적 설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새로운 증거는 국가마다 다른 궤적으로 나타났다. 북유럽 국가의 경우, 1960년대 약 2.5-2.8명의 수준을 보이던 합계출산율이 1980년대 중반 최하위 수준(약 1.5명)으로 낮아졌다가, 2000년대 이후 1.8명 이상으로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출산율의 감소를 경험했던 미국,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도 2000년대 이후 출산율의 반등 현상이 관찰된다. 그러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일본 등은 1.4명 이하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국가별로 다른 출산율의 ‘변화’와 ‘역동’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기존의 논의들은 출산율의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설명하기에 유효하나, 반등 현상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율의 저하와 반등을 일관된 논리로 설명해 온 ‘젠더평등’ 관점이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 들어 그 설득력이 점차 더 커지고 있다(McDonald, 2000; Esping-Andersen & Billari, 2015; 김영미, 2016).

출산율에 관한 젠더평등 관점의 대표적인 연구로 Esping-Andersen & Billari의 ‘다중균형모델’이 있다. 이들은 ‘여성혁명’(female revolution)의 진전에 따라 출산율의 역동이 관찰되며, 성평등주의 이행의 초기에는 출산율이 하락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산되면 출산율이 반등하여, U자형 혹은 V자형 관계를 나타낼 것이라 주장한다. 젠더평등 이론에 따른 출산율 반등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은 분석단위와 젠더평등의 측정방법에 따라, 미시적, 거시적, 통합적 관점에서 젠더평등과 출산율의 관계를 규명해왔다. 미시적 관점의 연구들은 젠더평등을 가정 내 가사분배 또는 성역할태도로 측정하면서, 가정 내 또는 사회 내 젠더평등 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증가하는 긍정적 관계

를 실증하고 있다(Torr & Short, 2004; Neyer, Lappegård & Vignoli, 2013; Arpino, Esping-Andersen & Pessin, 2015; Stefani & Prati, 2020). 거시적 관점의 연구들은 젠더평등을 국제 젠더평등지수나 노동시장 내 젠더평등, 가족정책의 수준 등으로 측정하며, 주로 젠더평등 지표와 출산율의 관계가 부(-)적 관계에서 정(+)적 관계로 역전되었음을 보여주거나, 젠더평등과 출산율의 U자형 관계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Rindfuss & Brewster, 1996; Ahn & Mira, 2002; Myrskylä, Kohler & Billari, 2009; Myrskylä, Kohler & Billari, 2011; Brinton & Lee, 2016; 이재경, 2006; 박수미, 2009; 민연경, 2015). 통합적 관점의 연구들은 대체로 다층회귀분석 통해 개인 혹은 가구 내 젠더평등 수준과 국가 수준의 젠더평등이 출산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비교하고 있다. 대체로 일과 가정에 대한 모순되는 성역할태도를 가진 여성의 출산 확률이 낮은 편이고, 성평등주의적 사회에서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기존의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다(Aassve, Billari & Pessin, 2012; Cho, Song & Moon, 2018; 계봉오·김영미, 2016; 김영미, 2016).

선행연구들은 젠더평등에 따른 출산율의 반응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실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연구 구성이나 방법론 측면에서 일부 한계를 보인다. 첫째, 대체로 횡단적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종단적 분석을 실시한 연구도 그 기간이 1990년대 또는 2000년대 이후로 비교적 제한적이다. 사회적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 동안의 관찰이 필수적이다. 둘째, 거시적 관점의 연구는 주로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한 그래프 분석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Rindfuss & Brewster, 1996; Ahn & Mira, 2002; 이재경, 2006; 박수미, 2009). 출산율에 관한 젠더평등 이론은 본래 다른 사회적 맥락과 출산 추세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거시이론으로 개발된 것이다(Arpino et al, 2015: 380). 따라서 젠더평등과 출산에 관한 맥락적 수준의 종합적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거시적 관점의 추론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1980년부터 2017년까지 총 38년의 기간 동안 OECD 16개국을 대상으로, 젠더평등과 출산율의 관계를 비교하여 다중균형모델의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거시적 관점에서 산점도분석과 결합시계열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근거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 유럽연합(EU)과 유엔(UN) 등의 국제기구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젠더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 주류화 의제를 광범위하게 제안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0).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저출산 대책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성평등 구현이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설정되는 등 젠더평등 관점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된 실증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젠더평등과 출산율의 관계에 관한 이론과 논의를 살펴보고, 거시적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유의미한 정책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젠더평등과 출산율의 관계: 다중균형모델

20세기 후반 북유럽과 북미에서 나타난 가족형태의 불안정성 증가와 결혼, 출산 감소의 추세는 가족경제학과 제2차 인구변천 등의 이론이 주장했던 ‘가족 약화’(less family) 시나리오를 충분히 뒷받침하는 듯 보였다(Esping-Andersen, 2009: 5-6). Becker로 대표되는 가족경제학 이론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여성의 교육수준, 노동시장 참가, 임금 등이 향상되면서 가족 내 성별 분업의 효용이 비용을 초과하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제2차 인구변천 이론은 개인주의의 심화 등 가치관 변화를 출산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일부 국가에서는 초저출산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반면, 일부 선진국에서는 출산율이 반등하는 등 국가 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sup>1)</sup> 출산율의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 유효했던 기존 이론들이 국가별 출산율의 변화와 역동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저출산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는 젠더평등 관점은 출산율의 역사적 궤적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국가 간 차이의 원인, 특히 북유럽과 영국,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는 저출산의 반등을 설명하는 거시적 접근이다. 단일한 이론적 체계를 갖고 있지 않지만, 젠더평등의 진전과 출산율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젠더평등의 진전이 출산율 저하 추세를 반등시킬지 또는 심화시킬지에 대한 의문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분석틀이다.

1) 이들 국가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와 출산율의 상관관계가 부적관계에서 정적관계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거나(Brewster & Rindfuss, 2000; Ahn & Mira, 2002; OECD, 2011),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퇴보하기보다 결혼, 모성, 이상 자녀 수 등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이 여전히 안정적인 추세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Scott & Braun, 2006).

Esping-Andersen<sup>2)</sup> & Billari(2015)의 ‘다중균형모델’(multiple equilibrium model)은 젠더평등과 출산율의 관계에 관한 논의 중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 손꼽히고 있다. 이 모델은 20세기 후반 출산율의 하락 추세와 21세기의 출산율 회복을 동시에 설명하는 이론적 틀이다. Esping-Andersen(2009: 26-27)은 경제학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균형’<sup>3)</sup> 개념을 도입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성의 역할 및 인구학적 행동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현 사회를 여러 개의 균형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경쟁하는 선호와 규범적 행위 기준들을 채택할 때 다중균형이 출현된다고 본 것이다. 2차 세계대전 무렵 서구 사회는 엄격한 성역할 분리의 ‘베커 균형’(Becker equilibrium)이 지배하는 사회였다. 높은 출산율, 조혼과 이른 첫 출산, 남성이 생계부양자이며 여성이 돌봄제공자인 핵가족, 안정적인 파트너십, 낮은 이혼율, 그리고 낮은 독신율 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이후 여성의 인적자본, 경제적 자율성, 평생 유급노동에 대한 요구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조적이고 급진적이며 ‘새로운 성평등 균형’(new equality equilibrium)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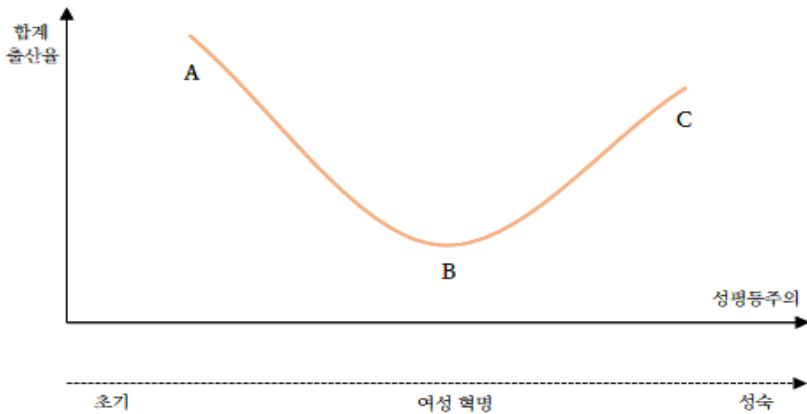
아래 [그림 1]은 성평등주의의 확산<sup>4)</sup>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여성혁명’(female revolution)의 진전 수준에 따라 출산율이 U자형을 띄고 있다. 전통적인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돌봄제공자 규범이 지배적인 A지점에서는 안정적인 결혼생활에 기반한 높은 출산율의 특징을 보인다. 점차 여성혁명이 진전되지만 사회가 충분히 적응하지 못해, 결혼의 불안정성이 나타나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B지점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후 성평등이 전체 사회계층에 확산되어 지배적인 규범적 지위를 확립하는 단계까지 도달하면, 출산율이 반등하는 C지점, 즉 새로운 가족균형을 달성하게 된다(Esping-Andersen & Billari, 2015: 8-9). 다중균형이론에서 가족변화의 역학은 주

2) 복지체제론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인 Esping-Andersen은 2000년대 이후 복지국가 연구에 성평등 이슈를 결합해 왔으며, 2009년 ‘끝나지 않은 혁명’(Incomplete Revolution)의 출간 전후로 여성의 역할변화와 일·가족 양립 문제, 출산, 양육과 이에 대한 복지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3) 경제학에서 균형은 경제 행위자들이 상식에 기초하여 경제적 행위를 하며 서로의 행동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사회학에서 균형은 개인의 선호, 행위, 타인에 대한 기대를 이끄는 널리 퍼져 있으며 체계모니적이고 규범적인 질서로 인식된다(Esping-Andersen, 2009: 26).

4) 다중균형모형은 거시수준의 속도 개념으로 젠더평등의 확산을 설명한다. 확산속도는 사회적 신뢰의 강도와 사회계층화의 영향 등의 두 가지 요인으로 결정된다. 전자는 사회의 규범이 동질적일수록 확산이 빠르고, 이질적일수록 불확실성을 초래하여 확산이 더딤을 의미한다. 후자는 인종적, 종교적 분리가 존재하고 교육적 장애물이 많을수록 확산의 속도가 더디거나 멈추게 된다고 설명한다(Esping-Andersen & Billari, 2015).

로 여성 역할의 변화,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돌봄제공자 모델의 침식을 수반하는 외부적 충격의 결과이다. 새로운 가족균형으로의 이행과정에서 출산율의 역동이 나타나며, 이행 초기에는 여성혁명의 진전이 일부 집단에게만 확산되어 출산율이 낮아지지만, 전체 사회계층으로 확산되면 출산율이 반등한다고 주장한다.



[그림 1] 젠더평등주의의 확산과 합계출산율의 관계

자료 : Esping-Andersen & Billari(2015: 9)

Esping-Andersen & Billari(2015: 24)는 젠더평등한 가족균형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성 생애주기의 남성화’와 ‘남성 생애주기의 여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여성 생애주기의 남성화란 모든 여성들이, 결혼, 출산, 양육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없이, 일생에 걸쳐 풀타임 전일제 근로자 규범을 갖게 될 때 이루어진다. 여성이 자신의 고용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남성화해야 근본적인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Esping-Andersen, 2009: 11). 따라서 여성을 2차 소득자로 강등시키고 일하는 여성이 일과 가사 일을 모두 부담하는 이중부담의 상황에 놓이게 하는 차별적인 노동시장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여성과 남성 모두 ‘소득자’인 동시에 ‘돌봄자’가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남성들이 가사와 양육을 평등하게 분담하는 것이 중요하다(Fraser, 1994: 611-613; Goldin, 2021: 355). C지점에 가장 근접한 북유럽 국가에는 스스로 ‘전업주부’라고 규정하는 여성의 비율이 1990년대 이후 3-5%에 불과하여(Korpi & Stern, 2008), 여성들의 생애과정이 확실히 남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국가에서 젠더평등이 확산되고 그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던 이유는 양질의

보편적 보육서비스, 가족 친화적 노동시장 정책, 낮은 성별 임금격차 등의 제도적 환경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젠더평등의 균형이 형성되는가는 국가별 제도적 특성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다(Esping- Andersen & Billari, 2015: 25).

## 2. 선행연구 검토: 실증과 반론

기존의 젠더평등과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는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연구자들마다 젠더평등의 개념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분석단위 측면에서 미시와 거시 수준의 연구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Neyer et al., 2013: 7; Brinton & Lee, 2016: 408). 우선 젠더평등과 출산율의 관계에 관한 미시적 관점의 연구는 결과보다 공정성과 기회가 남녀 사이에 어떻게 다른지에 관한 ‘젠더형평’(gender equity)의 개념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Torr & Short, 2004; Neyer et al., 2013; Arpino et al., 2015; Stefani & Prati, 2020). 젠더형평을 주로 가정 내 가사분배 또는 성역할 태도로 측정하면서, 젠더평등과 출산율 사이의 U자형 관계를 가정하여, 가정 내 또는 사회 내 젠더평등 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증가하는 긍정적 관계를 증거한다.

거시적 관점의 연구는 주로 정치, 사회, 경제, 가정영역에서의 결과가 남녀 사이에 어떻게 다른지에 관한 ‘젠더평등’(gender equality)에 관심을 갖고 젠더평등지수<sup>5)</sup>나 노동시장 내 젠더평등, 그리고 가족정책의 수준 등을 활용하고 있다. 초기 연구에서는 주로 젠더평등과 출산율의 상관관계가 부적 관계에서 정적 관계로 역전되었음을 보여주거나, 젠더평등과 출산율의 U자형 혹은 V자형 관계를 상관관계나 그래프를 통해 실증하고 있다(Rindfuss & Brewster, 1996; Ahn & Mira, 2002; Myrskylä et al., 2009; 이재경, 2006; 박수미, 2009). 최근에는 젠더평등지수와 노동시장 내 젠더평등 또는 가족정책의 변수를 결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변수의 구성이나 연구방법 측면에서 보다 정교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Myrskylä et al., 2011; Brinton & Lee, 2016; 민연경, 2015).

통합적 관점의 연구는 주로 다층분석 통해 개인과 가구 내 젠더평등과 국가 수준의 젠더평등이 출산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비교한다(Aassve et al.,

5) 주로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 남녀평등지수(GDI: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성불평등지수(GII: Gender Inequality Index), 그리고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GGI: Global Gender Gap Index) 등이 사용된다.

2012; Cho et al., 2018; 계봉오·김영미, 2016; 김영미, 2016). 대체로 일과 가정에 대한 모순적인 성역할태도, 즉 일에 대해서는 평등주의적이나 가정 내에서 전통주의적 성역할태도를 가진 여성의 출산 확률이 가장 낮게 나타나며, 젠더평등주의적 사회에서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기존의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술한 연구들과 다소 상이한 연구결과도 존재한다(Mills, 2010; Kolk, 2019). Mills(2010)는 유럽사회조사(ESS: European Social Survey) 내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개인수준 변수로, 5가지 국제 젠더평등지수를 국가수준 변수로 활용하여 다층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녀 평등지수(GDI)는 출산의도와 높은 연관을 보이지만, 출산이행과 유의미하지는 않지만—부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Mills (2010: 466)는 기존의 젠더평등 지표들이 개발도상국의 상황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며,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노동시장제도 등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변론하였다.

Kolk(2019)는 젠더평등의 수준과 출산율의 U자형 가설에 대해 본격적인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1960년도부터 2015년까지 총 35개국을 대상으로 일반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여성정치권력지수(WPEI: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Index)를 사용하여, 기존의 연구가 가지는 기간의 한계도 보완하였다. 그 결과, 국가 간 횡단 분석에서는 젠더평등과 출산율 간의 U자 관계를 관찰할 수 있으나, 종단적으로 시간 경과에 따른 동일 국가의 궤적을 보았을 때 U자형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국가 내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 젠더평등과 출산율은 대체로 부적관계를 보이며, 곡선 관계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적 횡단면 상관관계는 단지 일부 북서부 유럽 국가의 장기간 높은 젠더평등과 높은 출산율에서 비롯된 현상일 뿐이고, 특정 국가에서 젠더평등이 진전될수록 출산율이 증가하는 동태적 변화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종단 자료를 일반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방법론상 한계일 수 있다.



### III. 분석방법

#### 1. 분석대상과 분석기간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일정수준 이상의 경제규모와 복지제도를 갖춘 선진자본주의 국가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설정하였다. 동시에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 가능 수준(평균 2.1명) 이하의 저출산을 경험한 국가로 한정하였다. 이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인구변천의 단계가 유사한 국가군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젠더평등 수준과 출산율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비교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호주, 벨기에, 캐나다, 독일,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미국을 포함한 총 16개 국가이다.

연구의 분석기간은 1980년부터 가장 최신의 자료 이용이 가능한 2017년까지 총 38년으로 설정하였다. 1980년은 OECD 국가들의 출산율이 본격적으로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감소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선행연구를 보면 시기별로 합계출산율에 대한 젠더평등 수준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등 10년 단위의 총 4가지 시점으로 구분하여 결합시계열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사례 수는 총 608개(16개국×38년)이다.

#### 2. 주요 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합계출산율(TFR)이다.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인구의 연령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연령구조가 상이한 국가나 집단 간 출산수준을 비교하는 데 적합하며, 해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비교연구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자료의 출처는 OECD Dataset이며 원자료는 World Bank에서 제공한다.

독립변수는 젠더평등<sup>6)</sup> 수준이며, 여성의 정치적 권한 지수(WPEI)와 25-54세 여성 고용률의 표준점수의 평균값으로 산출하였다. 젠더평등 수준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젠더평등과 출산율의 거시적 관계를 실증하는 것이므로, 공적 영역의 젠더평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성의 공적 영역에의 참여는 젠더운동의 오랜 과제이자 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의 국가에서 많은 여성들이 형식적인 권리만 획득한 채 차별적인 배제와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표적인 공적 영역인 ‘정치와 경제영역의 여성의 참여’를 통해 젠더평등 수준을 복합지표로 측정하였다.<sup>7)</sup>

여성의 정치적 권한 지수는 민주주의 다양성(V-Dem)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민주주의 측정 지표 중 하나이다. V-Dem은 1900년부터 2020년까지 총 202개 국가를 대상으로 민주주의를 개념화하고 측정하고 있는데, 여러 민주주의 지수 중 가장 정교하고 세분화되어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여성의 정치적 권한 지수(WPEI)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젠더평등 복합지표들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Kolk, 2019: 30), 장기간의 시계열 자료가 구축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오랜 시간 여성운동과 젠더평등의 핵심 목표로 자리매김해 왔다. 해당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여성 고용률을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고용률은 15-64세까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로 측정되지만, 본 연구는 출산 및 양육기의 연령대에 주목하여 25-54세의 여성고용률 지표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출처는 OECD의 *LFS by Sex and Age*이다.

젠더평등 수준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실증하는 과정에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였다.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경제발전 수준과 가족정책 수준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 외에도 실업률, 노동시간, 교육수준 등이 활용될 수 있으나, 연구의 간결성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경제발전 수준과 가족정책 수준으로 제한하였다.

6) 본 연구에서 ‘젠더평등’(gender equality)은 공·사적 영역에서 성별로 인한 불이익을 극복하려는 노력과 그 결과를 의미한다. ‘젠더평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젠더형평’(gender equity)이 있는데, 젠더평등이 정치, 사회, 경제, 가정 영역의 결과가 여성과 남성 사이에 어떻게 다른지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면(Arpino et al., 2015), 젠더형평은 결과보다는 공정성과 기회가 남녀 사이에 어떻게 다른지와 관련된다(McDonald, 2013). 본 연구에서는 사회 구조 내 여러 영역에서 성별관계의 불평등성 ‘결과’에 초점을 맞추므로 젠더평등의 개념을 활용하고자 한다.

7) 젠더평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변수에는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성불평등지수나 성격차 지수, 혹은 남녀 임금격차 등이 있다. 그러나 해당 지표들은 측정 기간이 짧아 긴 시계열 자료를 필요로 하는 본 연구에 활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경제발전 수준은 1인당 GDP로, 가족정책 수준은 GDP 대비 가족급여 지출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주요 변수의 개념과 출처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개념과 출처

구분		변수	출처
종속변수		합계출산율	OECD Stats
독립변수	젠더평등 수준	여성의 정치적 권한 지수와 25-54세 여성고용률의 표준점수(z score)의 평균	V-Dem OECD Stats
통제변수	경제수준	로그 1인당 GDP	OECD Stats
	가족정책	GDP 대비 가족급여 지출 비중	OECD Family Database

###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외부효과와 시간효과의 통제가 가능한 결합시계열회귀분석을 통해 젠더평등의 증진에 따른 출산율의 반응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모델은 다음과 같다.

$$TFR_{it} = \beta_1 G_{it} + \sum_{j=1}^J \beta_j Z_{jit} + \gamma + \epsilon_{i,t}$$

(TFR: 합계출산율, G: 젠더평등 수준, Z: 통제변수들,  $\gamma$ : 고정효과(시간더미),  $\epsilon$ : 잔차,  $i$ : 국가,  $t$ : 시간)

종속변수는  $i$  국가,  $t$  년도의 합계출산율이며, 독립변수는 젠더평등 수준이고, 통제변수는 경제발전 수준과 가족급여 지출 비중이다. 고정효과가 존재하여 시간 더미를 투입하였다. 시기별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통제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과 포함한 모형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합시계열회귀분석을 활용할 경우, 일반선형(OLS)회귀의 기본 가정인 잔차의 자기상관, 이분산성, 동시상관이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진단한 후 보완하여 왜곡된 추정치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델을 구성해야 한다. 본 연구도 자기상관, 이분산성, 동시상관의 문제를 진단하고, Beck & Katz(1995)의 패널교정표준오차(PCSE: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모델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자기상관과 이분산성은 각각 Breusch-Pagan Lagrange Multiplier 검증과 Modified Wald 검증을 통해, 동시상관은 패널 간 상관관계에 대한 Pesaran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고정효과 모델인지 확률효과 모델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Hausman test를 실시하였다. 고정효과가 존재할 경우, 일반적으로 시간더미와 단위(국가)더미를 포함하는데, 본 연구와 같이 시간에 따른 관찰대상의 변화량이 크지 않을 때 국가더미를 사용할 경우, 변수에 대한 추정이 왜곡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간더미만을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Stata 16.0이다.

## IV. 분석결과

### 1. 기술통계 분석 결과

먼저 분석대상 국가들의 기술통계 결과를 살펴보자. 설명의 편의상 분석대상 국가를 복지체제와 지역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변수별 특성은 <표 2>, <표 3>과 같다. 우선 합계출산율의 전체적인 흐름은 1980년대에 높았던 출산율이 1990년대 들어 가파르게 감소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북유럽과 대륙유럽을 중심으로 다시 반등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군에서는 다소 등락이 관찰되나, 최근까지 평균 1.7명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남부유럽에서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여전히 1.4명 이하의 초저출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젠더평등 수준은 상대적으로 가장 평등하다고 알려진 사민주의 국가에서 1980년대에 이미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까지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 외 국가들에서는 1980년에 평균 -1점 이하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에는 모두 0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수주의 국가들이 사민주의 다음으로 높고, 자유주의와 남부유럽 국가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으나,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대체로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에서 젠더평등 수준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발전 수준은 전체 평균이 1980년대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남부유럽 국가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에서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가족급여 지출 비중은 알려진 대로 사민주의에서 가장 높았고, 보수주의, 자유주의, 남부유럽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민주의에서는 1980년대에도 2010년대의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일찍부터 가족정책이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표 2〉 국가별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1)

국가	합계출산율				젠더평등 수준			
	1980s	1990s	2000s	2010s	1980s	1990s	2000s	2010s
사민주의	1.63	1.78	1.78	1.78	0.94	0.91	1.01	0.98
보수주의	1.59	1.57	1.69	1.72	-0.88	0.51	0.56	0.75
남부유럽	1.70	1.32	1.36	1.35	-1.60	-0.72	-0.00	0.15
자유주의	1.79	1.74	1.71	1.71	-1.10	-0.38	0.12	0.24
전체 (N=608)	1.69	1.60	1.63	1.63	-0.78	-0.12	0.36	0.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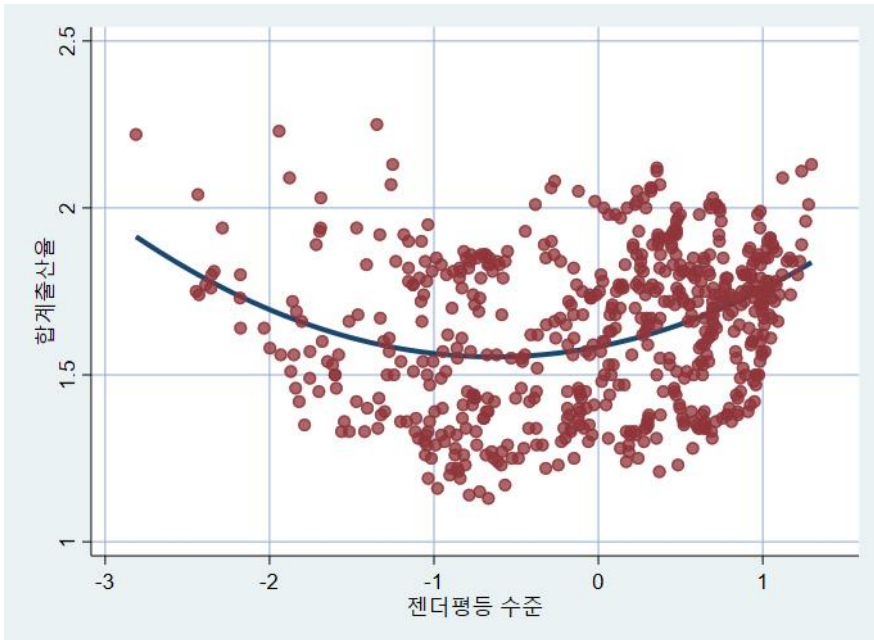
〈표 3〉 국가별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2)

국가	경제발전 수준				가족급여 지출			
	1980s	1990s	2000s	2010s	1980s	1990s	2000s	2010s
사민주의	9.53	9.98	10.43	10.73	2.92	3.62	3.19	3.41
보수주의	9.51	10.00	10.41	10.71	2.20	2.12	2.27	2.35
남부유럽	9.21	9.72	10.18	10.36	0.54	0.72	1.10	1.35
자유주의	9.56	10.05	10.46	10.71	0.99	1.24	1.65	1.90
전체 (N=608)	9.45	9.94	10.37	10.62	1.54	1.78	1.96	2.16

## 2. 산점도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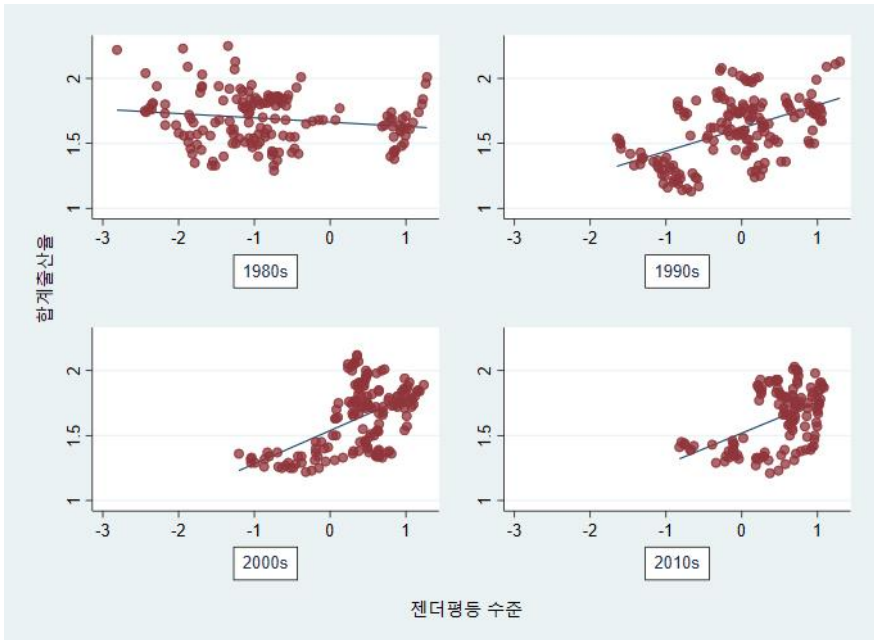
결합시계열회귀분석에 앞서 산점도분석을 통해 국가별 젠더평등과 출산율의 관계와 추이를 살펴보자. 젠더평등과 출산율의 관계는 U자형 혹은 V자형의 비선형 관계로 예측되어 왔으며, 국가마다 그 궤적이 다르게 나타난다. 산점도분석을 통해 이러한 비선형 관계를 시간의 흐름과 함께 파악할 수 있으며, 공간에 따른 비교도 가능하다.

[그림 2]는 합계출산율과 젠더평등 수준의 분석기간 전체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젠더평등 수준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젠더평등과 합계출산율의 관계가 다소 완만하긴 하지만 부정적 관계에서 정적 관계로 변화하는 U자형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낮은 젠더평등 수준이 일부 진전되면 출산율이 낮아지는 반면, 젠더평등 수준이 일정 정도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출산율이 다시 반등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16개 국가들은 비교적 OECD 국가 내에서도 젠더평등 수준이 이른 시기에 발달해온 국가들이므로 선행연구에 비해 기울기의 폭이 넓고 다소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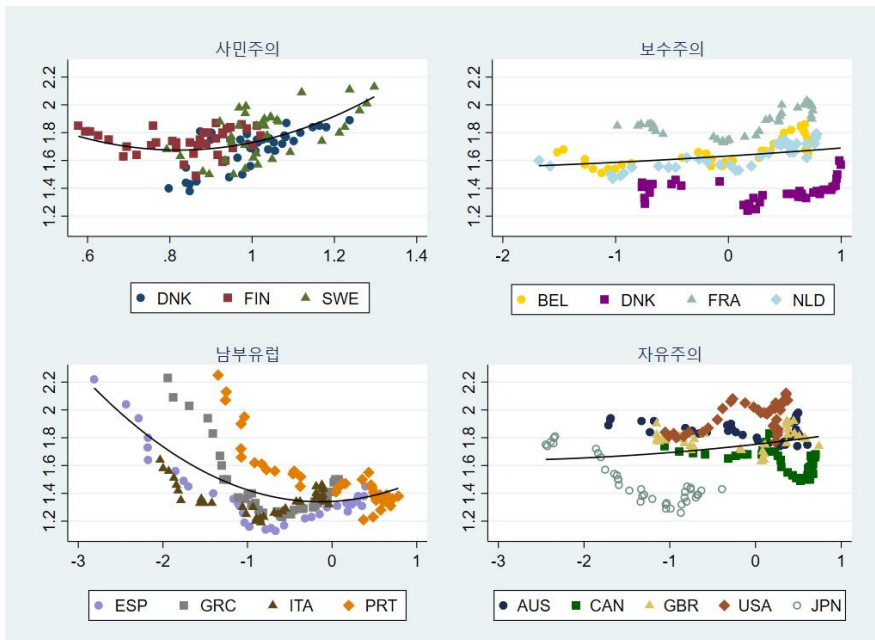
[그림 2] 합계출산율과 젠더평등 수준의 전체 추이

분석기간 전체 추이를 통해 U자형 분포를 확인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변화를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10년 단위의 시기별로 구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두 변수 간 관계는 시기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80년대에는 젠더평등 수준과 합계출산율이 낮은 수준이지만 부적 관계를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젠더평등 수준이 확대된 1990년대부터 두 변수 간 관계가 정적인 관계로 전환됨을 알 수 있다. U자 혹은 V자 추세선의 하한지점이 1990년일 수 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발견이다.



[그림 3] 합계출산율과 젠더평등 수준의 연도별 추이

한편 복지체제에 속한 개별 국가의 분포와 복지체제별 전체 평균 추이는 [그림 4]와 같다. 먼저 사민주의 국가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우측 꼬리가 긴 모습의 U자형 곡선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체제에 비해 높은 젠더평등의 수준과 높은 출산율 수준을 형성하고 있으며, 출산율의 반등 수준이 뚜렷하게 목격된다. 보편적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큰 사민주의 체제에서는 복지 제공의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으며, 일찍이 부모 모두에게 자녀양육의 책임을 부여하는 젠더평등한 정책이 발달해왔다. 특히 1970년대 이후 남성생계부양자모델에서 보편적생계부양자모델(혹은 이인소득자모델)로 정책모형을 전환시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김영미, 2007; 여유진 외, 2019). 이러한 영향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수준이 일찍부터 높게 유지되어 온 것이다. 동시에 서구 사회에서 처음으로 부모휴가를 반드시 아버지가 사용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보편적생계부양자 모델을 넘어 보편적돌봄제공자모델로 효과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출산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 합계출산율과 젠더평등 수준의 복지체제별 추이

다음으로 남부유럽 국가를 보면, 왼쪽 꼬리가 긴 U자형 또는 역 J자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부유럽 국가들은 복지국가의 가족주의적 특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체제이며, 남성생계부양자모형을 기반으로 출산 및 양육의 책임을 가족, 특히 여성에게 부과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류연구, 2005: 25).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돌봄노동이 오롯이 여성의 몫으로 남아, 여성은 일과 가정의 이중부담을 떠안게 되며, 이로 인해 출산 수준과 경제활동 수준이 모두 낮게 나타난다(Neyer, 2003).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약하게나마 오른쪽 꼬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젠더평등 수준이 대상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출산율도 여전히 1.4명의 초저출산 수준에 불과하여, 이를 반등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전체 평균의 분포가 우상향의 직선 모형으로 나타났다. 출산율과 젠더평등 수준 간 정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보수주의 체제는 남부유럽과 같이 가족책임주의가 강한 국가로 알려져 있으나, 가족정책의 규모와 질적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시민주의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남부유럽 국가에서보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여 젠더평등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가족급여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해당 비중이 낮은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가족급여 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남을 추정할 수 있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가족정책은 물론 복지지출 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젠더평등 수준과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국가는 대체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용이하게 하고, 저비용의 시장 서비스를 통해 돌봄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uci & Thévenon, 2010). 따라서 젠더평등 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캐나다와 미국에서 이러한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두 국가는 가족급여 지출 비중이 자유주의 체제 내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젠더평등 수준과 출산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높은 출산율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특정 인종(히스패닉)의 증가, 종교적 영향 등 특수한 문화적 배경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노동시장 내 젠더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직업의 성별통합(gender integration of occupations)은 더 진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전문직 진출과 기업 경영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보육에 대한 공적 지원은 제한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사적 서비스를 통해 보육의 틈새(slots)가 매워지고 있는 것도 다른 특징이다(O'Connor, Orloff & Shaver, 1999: 4-5). 이러한 특성의 영향으로 국가의 가족급여에 대한 지출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젠더평등 수준과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주요 변수들의 추이가 대체로 남부유럽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산점도분석을 통해 젠더평등과 출산율의 관계를 실증하였으며, 국가 및 복지체제별 특성과 차이를 파악하였다. 다만 산점도분석은 두 변수 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정확하게 통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외부효과와 시간효과의 통제가 가능한 결합시계열회귀분석을 통해 보다 정교하게 젠더평등과 출산율의 관계를 실증해 보자.

### 3. 결합시계열회귀분석 결과

젠더평등 수준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함에 앞서 결합시계열 자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형회귀 가정의 위배 문제를 확인하고, 본 연구에 적합한 모델을 설정하기 위해 다양한 검증을 실시하였다.<sup>8)</sup> Hausman test 검증 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8에서 고정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 더미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Modified Wald, Pesaran's test, 그리고 Adjusted LM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모형에서 이분산성, 동시상관, 자기상관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분산성 및 동시상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CSE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panel-specific AR(1) 옵션을 통해 자기상관 문제를 해결하였다.

합계출산율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모형들의 설명력은 모두 89%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보되었다. 1980년대의 모형1과 모형2에서는 합계출산율에 대한 젠더평등 수준의 영향이 유의미한 부적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모형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관계로 전환되어 젠더평등 수준과 합계출산율의 관계가 1990년대를 기점으로 반등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Esping-Andersen & Billari가 주장한 젠더평등과 출산율의 U자형 혹은 V자형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0년대에 독립변수인 젠더평등 수준만 포함한 모형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관계가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 젠더평등 수준은 여성의 정치적 권력 지수와 25-54세 여성 고용률 변수를 표준화시킨 값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젠더평등 수준은 기존의 연구에서 출산율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나, 관계의 양상은 다소 복잡하게 나타났다. 대체로 초기 연구에서는 젠더평등이 증가하면 여성의 사회참여나 노동시장 참여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자녀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하여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부적관계로 예견되었다(Becker & Lewis, 1973; Leibenstein, 1974; Becker, 1993). 본 연구에서도 1980년대에는 합계출산율에 대한 젠더평등 수준의 방향이 음수로 나와 관련 경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젠더평등 이론과도 연결되는데, 1980년대 시기에는 북유럽 국가를 제외하고 많은 국가에서 젠더평등 수준이 낮게 나타나, 전통적인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돌봄제공자' 규범이 여전히 지배적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젠더평등 이론은 이 시기 젠더

8) 검증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평등 수준이 확산되어도, 사회가 충분히 수용하지 못해 출산율이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도 각 국가에서 젠더평등 수준이 발달하기 시작한 이 시기에 부적 관계가 나타나 해당 이론의 내용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형2에서도 젠더평등 수준은 부적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가족급여 지출 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출산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젠더평등 변수의 계수 값의 크기가 다소 감소하였다. 통제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1에서는 젠더평등 수준이 1점 증가함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0.083명 감소하였으나,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형2에서는 젠더평등 수준이 1점 증가함에 따라 출산율이 0.059명 감소한 것이다. 가족정책의 영향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나 노동시장 참여, 출산과 양육의 양립 불가능성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젠더평등 수준이 출산율에 미치는 부적 영향의 계수 값이 축소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술했듯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족정책의 발달은 1990년대 이후에 확대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사민주의와 일부 보수주의 국가(벨기에, 프랑스)만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모형2에서 해당 변수의 통계적 유의도가 뚜렷하지 않은 이유는 이러한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기존 이론과 연구에 따르면, 경제발전 수준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양분되어 나타난다(Luci & Thévenon, 2010). 일부 연구에서는 경제발전 수준과 부적 관계를 주장하고 있는데(나진구, 2009; 황진영, 2013), 이들 연구는 1980년부터 2005년까지 패널자료를 결합하여 살펴본 것으로 시기별 방향성을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10년 단위로 시기를 구분하여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 시기별 방향성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1980년대 모형2에서는 경제발전 수준이 출산율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1990년대 이후 모형에서는 모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발전 수준 변수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 높아지면 출산율과 U자형 혹은 역 J자형 관계를 가진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Furuoka, 2009; Myrskylä et al, 2009; Luci & Thévenon, 2010).

1990년대 이후 모든 모형에서 젠더평등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합계출산율과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들어 젠더평등 수준과 출산율의 관계의 방향이 역전되어 정적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Rindfuss & Brewster, 1996; Ahn & Mira, 2002; Sleenbos, 2003; 류연규, 2005), 젠더평등 수준에 따라 출산율이 반등한다는 젠더평등 이론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Esping-Andersen & Billari, 2015).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나 정치적 참여와 같은 사

회진출이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전통적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돌봄제공자 모델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가 생계부양의 역할을 분담하는 새로운 성평등 모델로 이행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이 1990년대를 기점으로 다중균형모델에서 제시한 B지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정책 지출은 1980년대부터 꾸준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 관계를 갖고 있다. 복지국가의 가족 친화적 정책이 출산율을 증가시킨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1980년대 이후 계수 값이 미세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젠더평등 수준의 계수 값 또한 증가하여 가족정책이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의 문제를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9)</sup> 한편 경제발전 수준을 나타내는 로그 1인당 GDP도 1990년대를 기점으로 정적 관계로 변화하였다. 경제발전 수준은 기존 연구에 대체로 통제변수로 활용되어, 그 결과 해석에 주목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경제가 발전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출산율이 낮아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발전과 출산율의 관계가 정적으로 변화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1980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단위로 시기를 구분하여 출산율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젠더평등 수준이 1980년대에는 출산율과 부적관계를 보였으나, 1990년대부터 정적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1990년대를 기점으로 출산율과의 관계가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출산율과 관련된 젠더평등 이론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결과이다.

9) 가족정책에 대한 공공지출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지만, 증가폭이 국가별로 상이하며 동일한 국가 내에서도 지원유형에 따라 관련 지출의 증가 수준이 다르게 나타난다(이승윤·박고은·김윤영, 2014: 214). 최근 가족정책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김영미, 2016: 51). 현금 지원과 서비스 지원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출산에 작용할 수 있으며, 개별 정책의 조합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표 4〉 합계출산율에 대한 결합시계열회귀분석 결과

	1980s			1990s			2000s			2010s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모형7	모형8	모형9	모형10	모형11	모형12
젠더평등 수준	-0.083**	-0.059*	0.113***	0.056**	0.232***	0.086***	0.198***	0.084**				
로그 1인당 GDP		-0.171**		0.514***		0.450***		0.131				
GDP 대비 가족급여 총 지출		0.030		0.069***		0.069***		0.097***				
상수항	1.649***	3.246***	1.711***	-3.446***	1.554***	-3.195***	1.540***	0.001				
$R^2$	0.8997	0.9071	0.9347	0.9453	0.9192	0.9348	0.9367	0.9451				
Wald $x^2$	4.00**	13.70**	14.45***	272.70***	54.62***	129.92***	30.70***	132.42***				
사례 수(608)	160(16개국*10개년)			160(16개국*10개년)			160(16개국*10개년)			128(16개국*8개년)		
조정효과	시간더미	시간더미	시간더미	시간더미	없음	없음	없음	시간더미	없음	없음	없음	시간더미

주. \*\*\* $p < .001$ , \*\* $p < .05$ , \* $p < .1$

## V. 결 론

본 연구는 젠더평등의 증진에 따른 출산율 반등 가설을 실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젠더평등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출산율이 부적관계에서 정적관계로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국가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OECD 16개국의 1980년부터 2017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결합하여 산점도분석과 10년 단위의 시기별 결합시계열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젠더평등 수준과 합계출산율의 분석기간 전체 추이는 완만한 U자형 분포로 나타났다. 이를 10년 단위의 시기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1980년대에는 약한 부적관계였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젠더평등 수준이 확대된 1990년대부터 정적관계를 보이고 있다. 외부효과와 시간효과를 통제한 상황에서 결합시계열회귀분석을 통해 젠더평등 수준과 출산율의 관계가 1990년대를 기점으로 반등했음도 확인하였다. 이는 Esping-Andersen & Billari가 주장한 젠더평등과 출산율의 U자형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는 젠더평등 수준과 경제발전 수준이 낮고 가족급여 지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1990년대부터 젠더평등 수준과 경제발전 수준, 그리고 가족급여 지출 비중이 모두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 사회의 저출산 대책의 대략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저출산 관련정책의 중심축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1~3차에 걸쳐 수립되어 시행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정책의 범위와 수준이 크게 확대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3년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명 미만으로 매년 사상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그로 인해 현 정부는 2018년 제3차 기본계획의 전망과 목표를 완전히 재구조화하였으며, 정책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출산장려’에서 ‘전 생애 삶의 질 제고’ 및 ‘성평등 실현’ 등을 위한 종합적 대응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패러다임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 내용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기대성과가 모호하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다(송다영·백경훈, 2020: 177). 젠더평등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서 어떻게 진일보했는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젠더평등 관점의 실제적 기반이

확인되지 않으면 결과도 불분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간의 저출산 대책이 실효성을 얻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젠더평등 관점이 부족했다는 점에 있다. 2000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5명 이하로 하락하면서 현재까지 저출산은 고령화와 함께 우리 사회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이다. 현행 저출산 대응정책은 출산장려와 이를 통한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이라는 논리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여성이 인구 정책의 도구 또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영미, 2018: 111). 그러나 저출산 현상은 그간의 저출산 담론과 정책이 전제하고 있는 논리와 달리, 단순히 인구구조의 변화가 아닌 ‘젠더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저출산 현상은 남녀의 파트너십과 관련되어 왔으며, 이를 둘러싼 가족구조나 노동시장 등 젠더관계와 사회체계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이다(이재경 외, 2005: 35). 따라서 젠더관계의 변화를 포착하고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면 정책의 효과는 담보되지 못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젠더평등 수준을 여성의 정치적 참여와 노동시장 참여로 측정하였다. 이 수준이 높다는 것은 전통적 남성생계부양자 규범이 성평등적 규범으로 변화되어 성역할 변화가 비교적 뚜렷하게 부각된다는 의미이다. 젠더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여성은 일과 가정(출산, 돌봄 등) 사이의 갈등이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듯이, 대체로 젠더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의 반등이 뚜렷한 반면, 젠더평등 수준이 낮은 국가의 경우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고 있다. 젠더평등 이론이 강조하듯이, 출산율이 반등하여 젠더평등한 가족균형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성 생애주기의 남성화’와 ‘남성 생애주기의 여성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Esping-Andersen & Billari, 2015). 모든 여성들은 자신의 고용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남성화할 수 있어야 하며, 남성들은 그간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가사 및 돌봄을 여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과 남성이 모두 ‘생계부양자’인 동시에 ‘돌봄제공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 여건과 기회를 공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젠더평등 수준이 높고 일 가정양립의 가능성이 높은 사회에서 출산율이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그간 시행되어 온 저출산 대응정책은 여성과 남성 개인의 삶보다는 국가주의 담론에 장악되어 분명한 방향성이나 지향점이 부재해 왔다. 단지 저출산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면 국가가 발전한다는 식의 담론은 더 이상 시대 상황에 맞지 않으며, 개별 시민의 거부감만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저출산은 사회변동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이미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이중소득

자모델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양육과 돌봄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그리고 사회 전체가 일정하게 역할을 배분해야 할 것이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넘어 젠더평등 관점을 견지한 실질적인 정책들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관련 연구도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계봉오·김영미(2016). 저출산에 대한 문화적 접근-성평등주의와 출산의 관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 골딘, 클라우디아(2021). 커리어 그리고 가정: 평등을 향한 여성들의 기나긴 여정. 김승진(역). 생각의힘(Goldin, Claudia, *Career and Family: Women's Century-Long Journey toward Equ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1).
- 김영미(2007). 복지국가와 여성 노동권: 제도적 지원과 보장수준의 관계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_\_\_\_\_(2016). “출산과 성평등주의 다층분석”. *경제와사회*, 112, 41-74.
- \_\_\_\_\_(2018).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 분석: 저출산 담론의 재구성을 위하여”. *비판사회정책*, 59, 103-152.
- 나진구(2009). 가족 친화적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류연규(2005). 복지국가의 탈가족화와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민연경(2015). “〈기획특집〉 국정관리연구 10주년 기획: 지속 가능한 사회와 국정 관리: 노동시장 내 여성고용평등과 출산율의 관계 연구-OECD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정관리연구*, 10(3), 1-33.
- 박수미(2009). “성평등 사회 실현이 저출산 극복의 지름길”. *젠더리뷰*, 15, 30-35.
- 송다영·백경흔(2020). “성평등 관점에서의 저출산 기본계획 평가와 대안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36(1), 175-209.
- 에스핑 앤더슨, 요스타(2014). 끝나지 않은 혁명. 주은선·김영미(역). 서울: 나눔의 집(Esping-Andersen, Gøsta, *Incomplete Revolution: Adapting Welfare States to Women's New Roles*, Cambridge: Polity Press, 2009).
- 여유진·김미곤·김기태·김선·정재훈·김인춘·서현수·길리아노 보놀리(2019). 노르딕 모델과 대륙형 모델의 형성 및 변천과정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승윤·박고은·김윤영(2014). “가족정책의 세 가지 지원유형과 그 조합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사회복지정책*, 41(1), 213-240.

- 이재경·조영미·이은아·유정미(2005). 저출산의 젠더 분석 및 정책 대안 연구.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 이재경(2006). “저출산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평”. *젠더리뷰*, 1, 4-12.
- 황진영(2013).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및 합계출산율: 국가 간 실증분석”. *재정정책논집*, 15(1), 81-105.
- Ahn, N., & Mira, P.(2002). A note on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rates in 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5(4), 667-682.
- Arpino, B., Esping-Andersen, G., & Pessin, L.(2015). How do changes in gender role attitudes towards female employment influence fertility? A macro-level analysi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1(3), 370-382.
- Aassve, A., Billari, F. C., & Pessin, L.(2012). Trust and fertility dynamics. *Carlo F. Dondena Centre for Research on Social Dynamics Working Paper*, 55, 4-54.
- Beck, N., & Katz, J. N.(1995). What to do (and not to do) with time-series cross-section dat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3), 634-647.
- Becker, G. S. & Lewis, H.(1973). On the interaction between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 279-288.
- Becker, G. S.(1993). Nobel lecture: The economic way of looking at behavior.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1(3), 385-409.
- Brewster, K. L., & Rindfuss, R. R.(2000).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in industrialized n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1), 271-296.
- Brinton, M. C., & Lee, D. J.(2016). Gender-role ideology,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post-industrial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2(3), 405-433.
- Cho, Y., Song, A., & Moon, A.(2018). Low fertility based on gender equity perspectives: Dynamics between individual gender role attitudes and social norms in low-fertility countries. *In PAA 2018 Annual Meeting*, 1-20.
- Esping-Andersen, G., & Billari, F. C.(2015). Re-theorizing family

- demographic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1), 1-31.
- European Commission.(2010).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Strategy for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2010-2015*. Brussels: COM(2010) 491 final.
- Fraser, N.(1994). After the family wage: Gender equity and the welfare state. *Political Theory*, 22(4), 591-618.
- Furuoka, F.(2009). Looking for a j-shaped development-fertility relationship: Do advances in development really reverse fertility declines. *Economics Bulletin*, 29(4), 3067-3074.
- Goldscheider, F., Bernhardt, E., & Lappegård, T.(2015). The gender revolution: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changing family and demographic behavior.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2), 207-239.
- Kolk, M.(2019). Weak support for a u-shaped pattern between societal gender equality and fertility when comparing societies across time. *Demographic Research*, 40, 27-48.
- Korpi, T., & Stern, C.(2008). Globalization, deindustrialization and the labor market experiences of Swedish women, 1950 to 2000(Chapter 5). In H. P. Blossfeld & H. Hofmeister(Eds), *Globalization, Uncertainty and Women's Careers*. Cheltenham: Edward Elgar, 115-141.
- Leibenstein, H.(1974). An interpretation of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promising path or blind all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2(2), 457-479.
- Luci, A., & Thévenon, O.(2010). Does economic development drive the fertility rebound in OECD countries. *Documents de Travail de L'Ined*, 167, 1-45.
- McDonald, P.(2000).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427-439.
- Mills, M.(2010). Gender roles, gender (in)equality and fertility: An empirical test of five gender equity indices. *Canadian Studies in*

- Population [ARCHIVES]*, 37(3-4), 445-474.
- Myrskylä, M., Kohler, H. P., & Billari, F. C.(2009). Advances in development reverse fertility declines. *Nature*, 460(6), 741-743.
- 
- \_\_\_\_\_.(2011). High development and fertility: fertility at older reproductive ages and gender equality explain the positive link. *PSC Working Paper Series*, 30, 1-40.
- Neyer, G.(2003). Family policies and low fertility in Western Europe. *Journal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Population)*. S1: 46-93.
- Neyer, G., Lappegård, T., & Vignoli, D.(2013). Gender equality and fertility: Which equality matter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Revue Européenne de Démographie*, 29(3), 245-272.
- O'Connor, J. S., Orloff, A. S., & Shaver, S.(1999). *States, Markets, Families: Gender, Liberalism and Social Policy in Australia, Canada,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ECD.(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Paris: OECD Publishing.
- Rindfuss, R. R., & Brewster, K. L.(1996). Childrearing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2, 258-289.
- Scott, J., & Braun, M.(2006). Individualization of family values. In P. Ester, M. Braun, & P. Mohler (Eds.), *Globalization, value change, and generations: A cross-national and intergenerational perspective*. Leiden: Brill, 61-87.
- Sleebos, J.(2003).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15, Paris: OECD.
- Stefani, S., & Prati, G.(2020). Gender ideology and fertility: Evidence for a curvilinear hypothesis.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Bologna (Italy). <https://doi.org/10.31234/osf.io/g4nxh>
- Torr, B. M., & Short, S. E.(2004). Second births and the second shift: A research note on gender equity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1), 109-130.

〈부록 1〉 결합시계열회귀분석 검증 결과 (1)

		1980s		1990s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고정효과	Hausman	12.53***	8.41*	12.20***	15.30**
이분산성	Modified Wald	4186.75***	84415.44***	2461.08***	1540.84***
동시상관	Pesaran's test	477.733***	476.432***	426.906***	338.885***
자기상관	Adjusted LM	49.48***	43.38***	18.12***	26.08***

주. \*\*\* $p < .001$ , \*\* $p < .01$ , \* $p < .05$

〈부록 2〉 결합시계열회귀분석 검증 결과 (2)

		2000s		2010s	
		모형5	모형6	모형7	모형8
고정효과	Hausman	0.95	3.59	0.73	21.66***
이분산성	Modified Wald	594.00***	652.78***	335.93***	1465.56***
동시상관	Pesaran's test	408.080***	344.249***	479.678***	339.294***
자기상관	Adjusted LM	4.76*	12.46***	10.86**	29.03***

주. \*\*\* $p < .001$ , \*\* $p < .01$ , \* $p < .05$

Abstract

##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Equality and Total Fertility Rate: Focused on Comparison among OECD Countries

Ahyun Ryu\*·Kyo-seong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e the hypothesis of a rebound in the fertility rate due to the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For this purpose, scatter-plot analysis and pooled cross-sectional time-series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by combining longitudinal data from 16 OECD countries from 1980 to 2017.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 U-shaped distribution of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and the total fertility rate was observed,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fertility rate rebounded from the 1990s. In the 1980s, countries with low levels of gender equality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a higher proportion of family benefit expenditure showed higher fertility rates. However, since the 1990s, countries with higher levels of gender equality, economic development, and family benefit expenditures have shown higher fertility rates. Therefore, as the gender equality theory emphasizes, 'masculinization of the female life cycle' and 'feminization of the male life cycle' must be carried out together in order to achieve a gender-equal family balance by rebounding the fertility rate.

**Keywords :** Gender Equality, Total Fertility Rate, Multiple Equilibrium Model, Family Policy, Pooled Cross-Sectional Time-Series Analysis

---

\* First Author: MA,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ung-Ang University (dktmd1324@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School of Social Welfare, Chung-Ang University (kyoseong@cau.ac.kr)